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2020. 03.

교 육 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차 례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1. 추진 배경	1
2. 추진 경과	3
II. 추진 방향	5
III. 사업 내용	7
1. 사업 개요	7
2. 추진 내용	8
3. 정보의 공유 및 사업 간 연계	16
IV.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19
1. 사업 신청	19
2. 선정 절차	20
V. 사업 관리	24
1. 운영 관리	24
2. 예산 관리	25
3. 성과 관리	28
VI. 향후 추진 일정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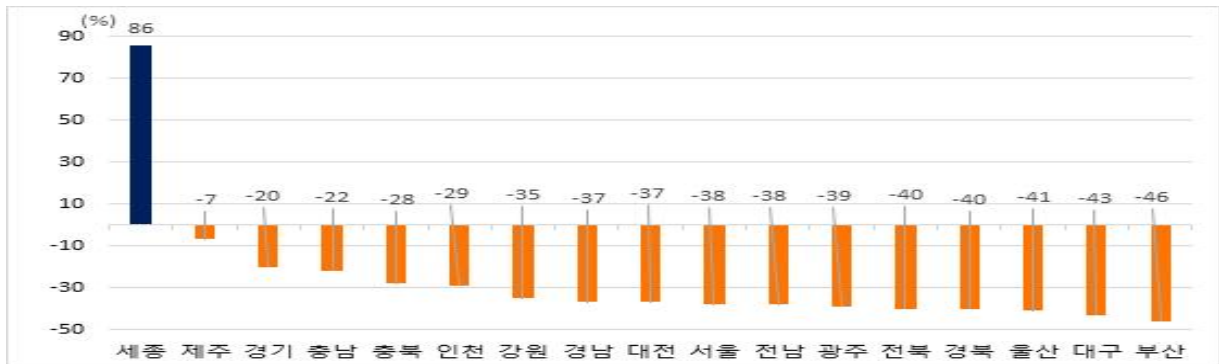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필요

- 향후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역위기 심화가 예견되는 상황
- 지역의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

< 시·도별 생산연령인구(15~64세) 증감률 ('17년 대비 '47년, 통계청) >



-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주요 국정기조로 대두

※ 대통령 직속 균형위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 발표 ('19. 10월)

1. 지역혁신기관 지정 및 사업 관리체계 마련
2. 지역혁신사업 추진방식 개편
3. 지역혁신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
4. 지역혁신활동 지원서비스 체계 개편

□ '지역대학이 가진 역량'의 전략적 활용 미흡

- 대학은 지역 경제·산업·사회·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됨

※ (독일 아헨공대) 학사구조를 개편하여 융합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내외 연구소,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교육-연구개발-실용화 역량 강화

- 그러나 우리 대학은 지역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지역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

※ “대학과 지자체·지역혁신주체 간 교류가 부족하여 지역 내 유기적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00 테크노파크, 기재부 차관 주재 지역혁신주체 연계·협업 간담회, '20.2.18.)

- 특히, 현행의 개별대학 단위 지원방식으로는 지역 수요를 고려한 대학 간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

- 또한, 다양한 대학 지원 사업이 지역 내에서도 부처별·분절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어려움

※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관련 중앙부처·지자체 사업 총 655개가 분절적으로 추진 중('18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

□ ‘대학-지역 간 협업’ 체계 구축 지원 시급

- 지역은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
- 중앙부처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을 적극 지원하여 협력하는 ‘상향식 혁신체계’ 확립 시급

「유럽 혁신도시 상」('14~)

(European Capital of Innovation Awards – A place to bring ideas to life)

▶ 시민, 공공부문, 대학, 산업부문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도시생태계’ 지원

▶ 도시생태계 구축이 우수한 도시를 선정하여 수상함으로써 지역혁신체계 성과 확산

※ 2019 수상도시: 에스포(핀란드), 낭트(프랑스), 앤트워프(벨기에), 브리스틀(영국), 글래스고(영국), 로테르담(네덜란드)



- 대학과 지역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협업의지 촉진을 위한 지원 필요
- 대학들이 지역 혁신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의 주협업자로서의 위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

2 추진 경과

-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19. 7 ~ '20. 2월)
- ☐ 사업 관계자 회의 개최 및 설명
 - 지자체 관계자 대상 회의 개최('19. 7~12월, 3회)
 - 2019년 전국 대학교 기획처장 협의회 참석 및 설명('19. 12월)
 - 지자체·대학 관계자 합동 회의 개최('20. 1. 29.)
- ☐ 부총리 주재 부내 정책토론회 개최('19. 12월, 2회)
- ☐ 차관 주재 교육부 출입기자단 정책토론회('20. 1. 13.)
- ☐ 부총리 주재 2020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논의('20. 1. 17.)
- ☐ 부총리 브리핑: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 발표('20. 1. 20.)
- ☐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녹실간담회 안건 상정·논의('20. 2. 4.)
- ☐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협의
 - 부처별 사업 담당자 협의 실시('19. 7 ~ '20. 3월)
 - ※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행안부, 기재부, 균형위
 - 교육부 차관 주재 제1차 관계부처* 협업 예산 협의회 개최('20. 2. 12.)
 - * 교육부·과기부·산업부·중기부·행안부·국토부·기재부·균형위 등으로 구성
 -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연계·협업방안 간담회 개최('20. 2. 18.)
 - ※ 교육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행안부, 균형위 참석
- ☐ 부총리 주재 충청권 간담회 개최('20. 2. 17.)
 - ※ 강원권, 경상권, 전라·제주권은 서면으로 의견 수렴(2월 중)

【 현장의 주요 의견 】

◆ 대학의 역할

- 대학교육혁신이 지역의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학과 개편 등 현행의 대학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대학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이 가능
- 대학이 가진 혁신역량을 지역에 확산시키는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대학이 지역 내 기관과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이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것임
- 대학은 산업 발전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

◆ 지자체의 역할

- 지자체의 역할이 단순히 재정적 지원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핵심분야, 과제 선정권한 등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수요와 부합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사업총괄부서 외에 핵심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함께 참여해야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내 부서 간 연계·협업이 필요

◆ 참여 범위

- 자율개선대학 뿐 아니라 역량강화대학도 지역여건에 따라 중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진단 대상이 아닌 대학들도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나눠먹기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역 내에서도 모든 주체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선택과 집중 필요

◆ 사업의 범위

- 그간 산업분야의 대학-지역 협력이 강조되었으나 경제적 성장 뿐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가 함께 발전해야 지역정주 여건 제고를 통한 인구유입 가능

◆ 플랫폼 운영

- 지역혁신 플랫폼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여 플랫폼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및 전문성 확보 필요
- 대학-지역 간 협업을 위해 지역협업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
-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및 지역 내 대학 관련 사업 간 연계를 위해 플랫폼을 개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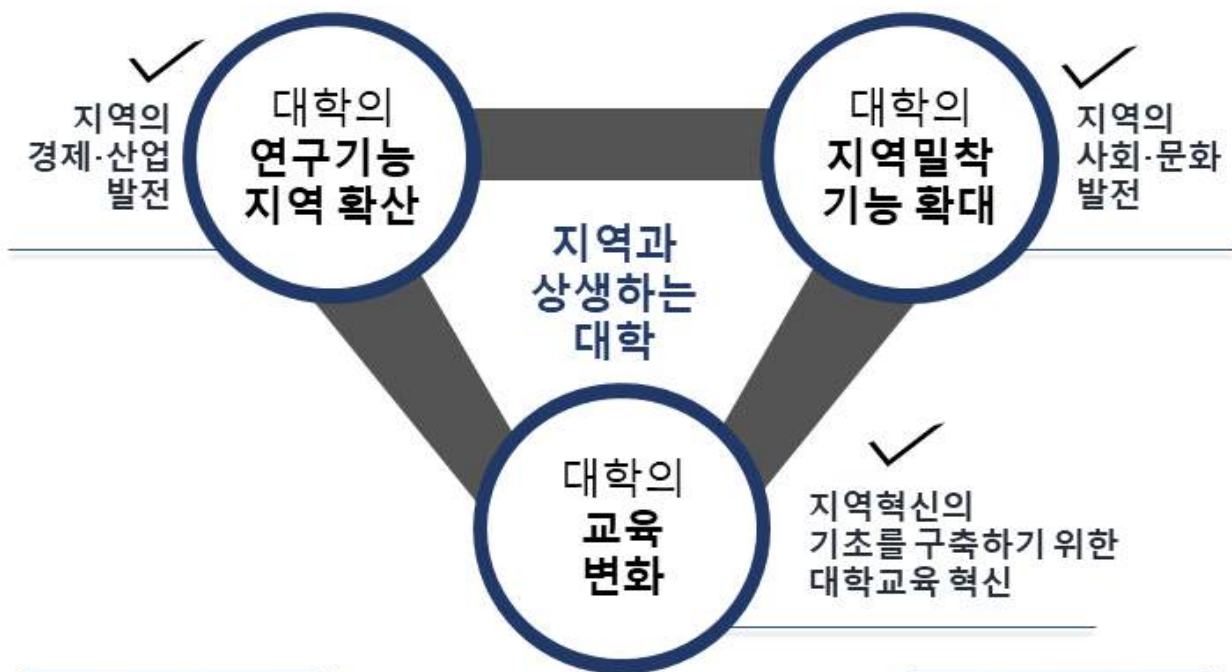
II. 추진 방향

비전

대학의 혁신,
지역의 혁신으로!

목표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



핵심가치

추진전략



□ 핵심가치

- (개방·참여) 지역혁신의 범위를 확장, 대학 외에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지역혁신의 효과성 제고

기 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지역의 산업에 제한 ■ (주체) 기업·산업체 중심으로 참여하여 대학의 역할이 제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지역의 경제·산업, 사회·문화 포괄 ■ (주체) 대학, 지자체, 기업, 교육청, 학교,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구·특구·단지 등

- (공유·연계) 지역이 보유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하여 지역혁신의 시너지 효과 창출

기 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유) 사업정보관리체계 부재 ■ (사업연계) 칸막이식·분절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유) 중앙부처·지자체 지원 사업의 현황 정보 등 총괄 관리 ■ (사업연계) 사업간 중복 방지·사각지대 보완·상호조정을 통한 융합

- (성과·지속) '지역 주도 - 중앙정부 지원'의 상향식(bottom-up)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의 자율혁신역량 및 지속가능성 제고

기 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창출) 지역의 수요 반영 어려움 ■ (지속가능성) 지역의 독립성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창출) 지역수요가 반영된 사업결과 ■ (지속가능성) 지역의 자율적 추진으로 자생력 강화

□ 기대효과

-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 및 교육·연구·지역밀착 기능을 지역수요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대학이 지역의 경제·산업·사회·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함
- 대학이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지역 내 다양한 혁신기관과 협업하여 자율적인 지역혁신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지역대학·지역수요 연계 → 우수 지역인재 육성 → 지역 경쟁력 제고 → 지역 정주여건 개선 →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 구축

Ⅲ. 사업 내용

1 사업 개요

□ 지원내용

-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1)플랫폼*을 구축하여 (2)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 (3)'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a)교육체계를 개편하고, ^(b)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

* 대학과 연계된 지역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다각적 협업의 장

□ 지원대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플랫폼 참여 기관>

□ 지자체 (비수도권 광역시·도)

- (단일형) 1개의 '광역시' 또는 '도' 단독
- (복수형) '도'와 그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광역시'의 연합, 또는 하나의 '도'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광역시' 간 연합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진단 미참여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 참여 가능
- 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과학기술원, 폴리텍대학 등)도 참여 가능
- 다만, 총괄대학* 및 중심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의 학교로서 동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또는 '역량강화대학'만 가능

* 중심대학 중 1개교로 대학부문을 대표, 대학교육혁신본부 주관 및 총사업비 관리

** 각 핵심분야를 주관하는 대학

□ 그 밖의 지역혁신기관

- 기업, 연구소, 상공회의소, 교육청, 학교, 테크노파크, 창조경제 혁신센터, 지구·특구·단지 관리기관 등 다양한 지역혁신기관

□ **선정규모:** 총 3개 플랫폼

□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2020년 선정 시 ~ 2021년 5월

○ (사업예산) 국고 1,080억원 (사업관리비 6억원 포함)

※ 총사업비(국고+지방비)의 30% 이상은 지방비로 부담

- (단일형) 국고 300억원 내외, 지방비 128억원 내외

- (복수형) 국고 480억원 내외, 지방비 206억원 내외

※ 유형(단일/복수형)별 선정 개수 및 지원예산 규모는 평가를 통해 확정

2 추진 내용

(1) 플랫폼 구축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 (개념) 대학과 연계된 지역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다각적 협업의 장(場)

※ 플랫폼(platform):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개방적 공간

○ (특징) 개방과 참여, 공유와 연계, 성과와 지속가능성

○ (기능) 지역혁신 전략의 제시, 아이디어·기술의 융·복합 촉진, 자원과 정보의 공유, 주체 간 협업·사업 간 연계 지원

○ (효과) 지역 성장 동력의 강화, 지역의 사회·문화 자본 축적

□ 플랫폼의 운영 체계

- 플랫폼 운영조직은 심의·의결기구인 '지역협업위원회', 기획·집행기구인 '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및 분야별 팀'으로 구성
- 플랫폼 운영조직을 '법인'으로 운영 가능
 - 지역에서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 설립된 법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 가능
 - * 기 설립된 법인의 경우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본 사업을 법인의 주요 기능으로 하고 사업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함
 - 다만, 법인의 설립·변경 및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추진 가능하며,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 '20년 시범사업 기간 중 협의(지역별 법인 설립·운영계획 검토 등)

□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 · 운영

-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사업비에 관한 사항 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정기적 회의 등을 통해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위원은 지자체, 총괄대학, 중심대학 및 지역혁신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테크노파크 원장,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지구·특구·단지 관리기관의 장, 지방중소기업청장, 교육감, 기업CEO 등이 참여할 수 있음
 - ※ 선정 지역의 사업 안착을 위해 교육부 관계관도 위원으로 포함
- 위원장은 지자체 장과 총괄대학의 장이 공동으로 하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역협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기획·집행기구'에서 실행

□ 기획 · 집행기구의 구성 · 운영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기획·집행을 추진하는 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팀을 설치
- 직원은 대학이 지역과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지자체·기업·연구소·학교 등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의 ‘파견 인력’과 ‘채용 전담직원’들로 구성

< 플랫폼 운영 체계 >



※ 위 틀을 참고하되, 각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조직의 명칭, 구성, 인력 배치, 사무소 위치 등을 다양하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총괄운영센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기획·조정하며, 조직운영 전반을 총괄·관리
 - ‘핵심분야 선정 및 분야별 역할분담’, ‘대학교육혁신과 핵심분야별 과제추진 총괄·점검·관리’, ‘정보의 공유·관리체계 구축’ 등
 - 센터장은 전문성·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협업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으로서 중요사항 논의 및 진행상황 수시 공유
 - ※ 다만,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정원이 이미 채워진 경우, 센터장을 위촉 우선 순위자로 하여 공석이 생기면 그 이후부터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대학교육혁신본부) 총괄대학이 주관하며, 핵심분야를 고려한 대학별 교육혁신 방향 설정·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관리
 - (대학 간 협의 지원) 대학별 교육혁신 방향 설정을 위한 분석·진단 및 대학 간 논의의 장* 마련 지원
 - * 교무위원급 이상 인사 간 협의 및 실무회의 운영 지원 등
 - (교육혁신 관리) 각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학교육혁신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관리
- (핵심분야별 팀) 핵심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부서와 중심대학이 주관하며, 핵심분야 과제 설정·추진에 관한 제반을 지원·관리
 - (협업 지원) 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업 기반 조성·지원
 - (과제수행 관리) 과제별 추진과정을 점검, 성과를 관리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별 애로사항 자문

< 플랫폼 운영 흐름 >

<심의의결기구>

지역협업위원회 (지자체장/중심대학장/기업 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계획** 확정

<추진실행기구>

총괄운영센터 (지자체, 대학 등)

핵심분야 선정, 분야별 역할분담

대학교육혁신본부 (총괄대학 주관)

핵심분야 (지자체부서, 중심대학)

지역 내 대학들의
교육체계 분석

지자체 주도로
핵심분야 목표 달성 위한
“**대과제**” 설정

역할분담에 따른
대학별 개편방안 제시

중심대학이
협업기관과 연계하여
“**소과제**” 자율적 구성·운영

대학교육혁신
추진과정·성과관리

[2] 핵심분야 선정 및 역할분담

□ 핵심분야

- 대학이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서
 - 지역 전략산업, 지역 현안 등 다양한 범위에서 선정할 수 있으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최우선순위 분야를 소수 선정
 - 해당 지역 내 경쟁력이 있는 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영역(동종산업 내 연계가능한 핵심분야 등) 중심으로 신청
- 지자체별·대학별 중장기발전계획·지역혁신성장계획·지역산업진흥계획 등 기존의 자체 발전계획들과 방향성이 부합하도록 선정
 - ※ (복수형) 핵심분야가 지자체별 발전계획들과 방향성이 부합해야 함
 - 중장기(5년 이상)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정하여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정하지 않도록 유의

<해 외의 핵심분야 선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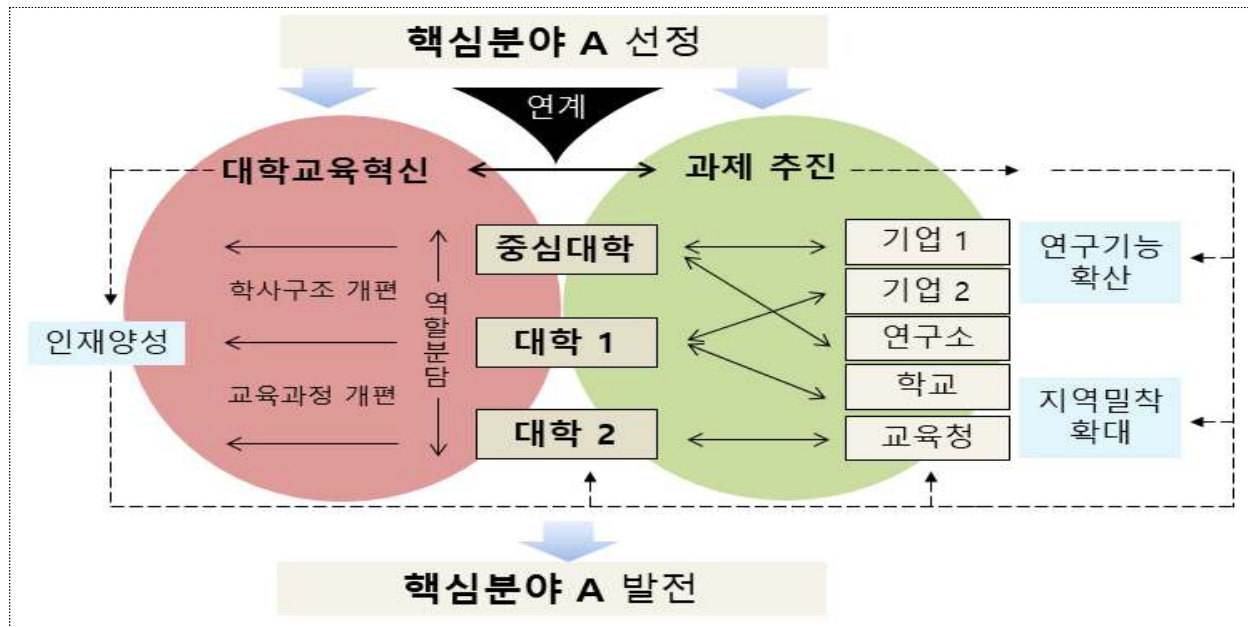
구분	핵심분야	선정기준
독일 도르트문트	첨단·디지털 물류산업	▶ 지역의 전략산업과 대학 내 프라운호프 연구소 특화분야(물류) 연계
	생명·의료산업	▶ 지역의 전략산업과 대학 내 막스프랑크 연구소의 특화분야(분자생물학과 화학 융합, 제약산업) 연계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 방법체계	▶ 펜실베니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발생, 필라델피아 시 범죄율 상승 등 지역의 현안 고려

□ 역할분담

- 각 핵심분야를 주관할 '지자체 부서'와 '중심대학'을 결정하되, 부서별 소관 업무 및 대학별 특성화 전략·해당 핵심분야 관련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 핵심분야별로 하나의 대학만 중심대학이 될 수 있음
 - ※ 하나의 대학이 두 개 이상의 핵심분야에서 중심대학이 되는 것은 가능
- 중심대학 중에서 한 대학은 대학부문을 대표하는 '총괄대학'이 되어 대학 간 협의를 주관

[3] 핵심분야별 혁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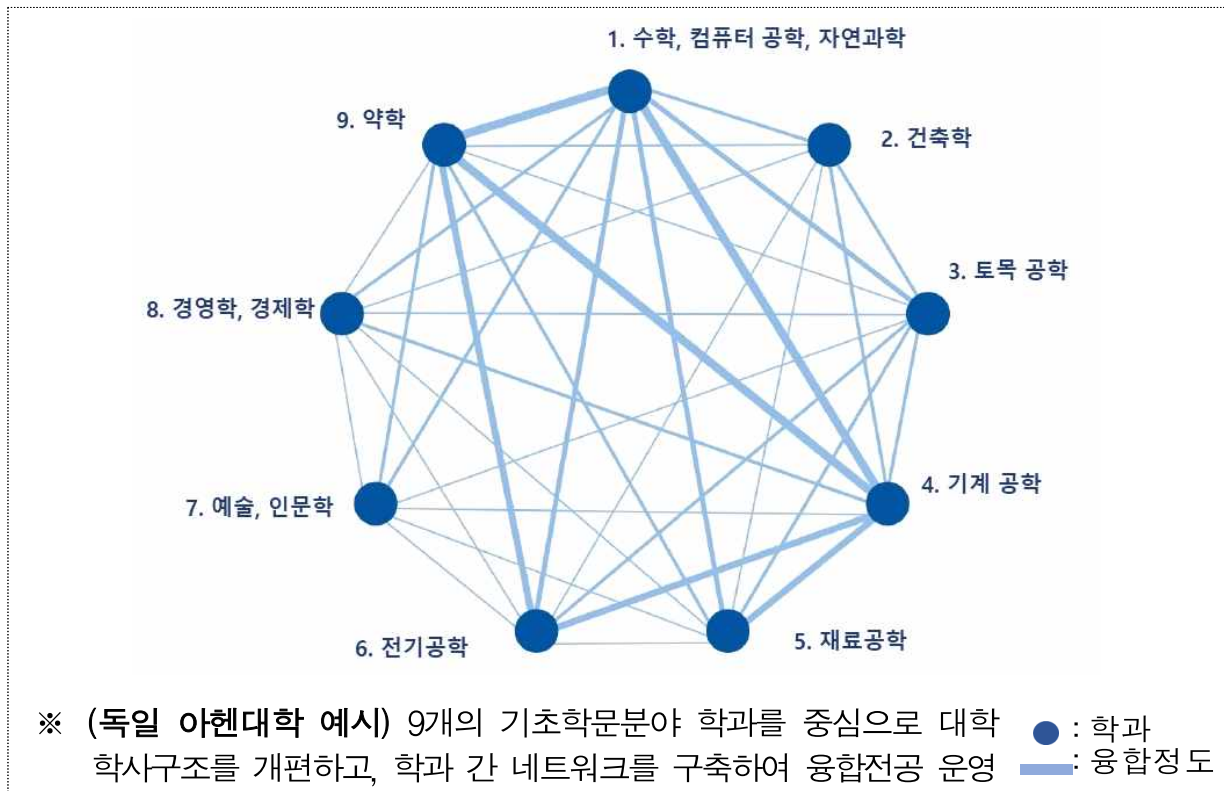
- 총괄운영센터는 각각의 핵심분야 내에서 '①대학교육 혁신'과 '②분야별 과제'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① 핵심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추진

□ 대학교육혁신 내용

- (대학 간 역할분담) 대학 간 논의를 거쳐 핵심분야별 역할분담 체계에 부응하는 '대학별 교육혁신 방향 설정'
 - 대학교육혁신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교육체계(학과·정원 분포, 교육과정) 등을 분석하고, 핵심분야와의 연계성(인력수급 불일치 등) 진단
 - 분석·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로 교육혁신을 추진할 핵심분야를 결정하되, 대학의 발전계획·특성화전략 등과 부합해야 함
- (교육체계 개편) 해당 핵심분야 관련 대학들과 지역혁신기관 간 논의를 거쳐 '대학별 교육체계 개편방안 구체화'
 - 동일 핵심분야 내에서도 대학별로 중점적으로 육성할 세부분야를 정하고, 해당 분야 육성을 위한 학사구조·교육과정 개편 등 추진



< 교육체제 개편유형 예시 >

대학 간 역할분담	학사구조 개편	교육과정 개편
-대학간 교원·교육과정 연계·교류 및 상호인정 -대학간 공동 학위과정	-단과대학/학과(부)/전공 편제 개편 -학사구조 구분에 따른 교원/직원/학생 정원 조정 -정원운용의 유연성 제고	-학사과정/대학원 과정 교과목 편제 개편 -전공과정/교양기초과정 교과목 개편 -문제해결형 방식 등 현장밀착형 교수학습방법

□ 대학교육혁신 참여

- (참여조건)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의 학교 중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 대학 및 역량강화대학'으로서 '핵심분야별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
 ※ 수행단위는 각 대학의 본부
- (참여방법) 총괄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체제 개편계획 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여 참여

2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

□ 과제 설정

- (대과제 설정) 지자체가 총괄하여 핵심분야의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성과목표인 ‘대과제’를 설정
 - 핵심분야 혁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범위 또는 단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과제를 다각적으로 구성
- * (단계 예시) 연구개발 단계, 사업화 단계 등
- (소과제 구성·운영) 대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 ‘소과제’들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중심대학이 구성·운영 총괄
 -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며, 관련 중앙부처·지자체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정
 - 소과제는 하나의 ‘대학’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단독과제’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업과제’로 구분하며, 각 과제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기관이 과제별 참여기관으로 참여

< 핵심분야(첨단·디지털 물류산업) 소과제 설정 예시 >

대 과제	소과제	과제 참여기관
지역기업의 물류체계 디지털화	▶기업의 내·외부 물류체계 최적화 방안 연구	(주관기관) A대학 기계물류전공 (협업기관) B기업, 물류연구소
	▶특성화고 기계과-전문대학 기계 공학과-물류기업 연계 교육과정 마련 및 계약학과 운영	(주관기관) C대학 기계공학과 (협업기관) D특성화고, 교육청, E기업

□ 과제 참여

- (단독과제 참여조건) ‘대학교육혁신’에 참여하는 대학만 가능
- (협업과제 참여조건) 다양한 지역혁신기관(고등교육법 및 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포함)이 참여 가능하나, ‘대학교육혁신’에 참여하는 대학이 하나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구분	단독과제	협업과제
참여 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 협업기관1 + 협업기관2 + ...
참여 조건	▶ 대학교육혁신에 참여하는 대학만 참여 가능	▶ 다양한 지역혁신기관과 고등교육법 및 타법률상 고등교육기관이 주관기관, 협업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학교육혁신에 참여하는 대학 하나 이상 필수 참여

- 협업과제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대학 외 기관이 주관기관*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과제수행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한 개 기관만 가능하며, 협업기관은 두 개 이상 기관이 참여 가능

○ (참여방법) 참여기관은 중심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과제 수행 과정상 역할을 명확히 하여 참여

- 협업과제의 경우 주관기관과 협업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제시

3 정보의 공유 및 사업 간 연계

□ 기본방향

1. 사업계획 수립단계

□ 지역 내 대학 관련 사업 현황 관리 및 분석	지역 (플랫폼)
• 부처별로 지원하고 있는 대학 관련 사업 정보 취합, 공유	중앙부처 (관계부처 합동)
•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정보 취합, 공유	지자체 (대학 관련 부서 주관)
•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 정보 취합, 공유	지역 내 개별 대학 (본부 주관)
□ 사업 간 연계를 고려한 과제 설정	지역 (플랫폼)
• 연계사업 발굴 및 연계방안 모색	중앙부처 (관계부처 합동)

2. 사업계획 추진단계

□ 사업 간 연계 추진	지역(플랫폼)
• 지역(플랫폼)의 애로사항 발굴, 해결방안 논의	중앙부처 (관계부처 합동)
• 사업의 전 단계에서 컨설팅 운영, 우수 사례 공유	교육부

□ 정보의 공유 · 관리

- (정보 취합·공유) 지역혁신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인력, 예산, 물적자원 등) 및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대학 관련 사업의 지원내용·대상·규모 등의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공유·취합
- (정보 관리·분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간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분석 작업 진행

□ 사업 간 연계

- (연계사업 발굴) 대학교육혁신 방안 마련 및 핵심분야별 과제 설정 시 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
- (연계방안 모색) 연계 추진이 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구체적인 '사업 간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사업 간 연계 유형별 예시 >

1. 인적·물적 자원 공동 활용

- (연계대상) 기업·연구소 등을 공간적으로 집적하는 지구·단지·특구 조성 사업, 시설·장비 구축 지원 사업, 비예산 정책 사업 등
- (연계방안) 지구·단지·특구 내 기관·시설과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지구·단지·특구의 기능 활성화 또는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타 사업에 개방하여 공동 활용

① 국토부·교육부·중기부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현행) 선도사업 3개소 선정 후 단지 및 기업공간 조성 추진 중	⇒	(연계) 혁신파크 내 입주기업 대상 산학협력, 창업·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산업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현행) 지구 구축 완료 후 국고지원이 종료	⇒	(연계) 지구 내 입주기업 대상 대학의 연구개발·사업화 및 재직자 교육 등 지원
③ 교육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개요) 산업체·대학 등을 활용한 학교 밖 학습 경험도 학점 인정	⇒	(연계) 대학의 시설·강사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

- (연계대상) 대학이 수행 중인 사업, 대학이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으나 새로운 수행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등
- (연계방안) 대학을 활용하여 기존 사업의 전·후 단계 지원 또는 지원범위 확대

① 행안부 ‘지역혁신포럼’		
(현행) 수행기관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국한	⇒	(연계) 대학이 기존 수행주체들과 함께 해결
② 산업부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		
(현행) 클러스터 내 부설 연구소가 없는 기업은 R&D 프로젝트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연계) 부설 연구소가 없는 클러스터 내 기업과 대학을 연계하여 R&D·사업화 지원
③ 중기부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		
(현행)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해당 중소기업과 대학의 기술전문가 매칭	⇒	(연계) 매칭된 대학이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후 사업화·마케팅 과제 함께 수행

3. 사업 간 상호조정

- (연계대상) 사업 목적 및 추진체계가 유사한 사업 등
- (연계방안) 사업내용 조정 및 사업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① 교육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현행) 지방대학이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연계) '24년부터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협력체계를 지역혁신플랫폼 체계로 편입하여 운영

- (연계추진 관리) 사업 간 연계 추진과정 및 성과를 관리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발굴·개선

※ 필요시 교육부 차관 주재 협업예산 협의회(교육부·산업부·과기부·중기부·행안부·국토부·기재부·균형위 등)를 통해 검토

IV.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1 사업 신청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지자체와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학* 등이 구성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 분교는 분교가 실제로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캠퍼스는 본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하는 지역혁신기관의 장들과 (예비)센터장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

※ (예비접수) 사업 공고 후 30일 이내에 사업신청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사업 신청 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예산신청) 단일형은 국고 기준 300억원 내외, 복수형은 국고 기준 480억원 내외로 신청하며, 선정 후 사업비 조정 가능

- 총사업비(국고+지방비) 30% 이상의 지자체 대응투자 확보(현물 미포함)

- (작성내용) 사업추진방향,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내용, 재정투자계획, 성과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작성하되, 지역혁신 플랫폼의 5개년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

※ 복수형의 경우 각각의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

- (유의사항)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타 재정지원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투자 및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 대학혁신지원사업 I, II 유형 포함

2 선정 절차

□ 개 요

- (선정규모) 단일형·복수형 총 3개 지역혁신 플랫폼
- (선정방법) 평가단의 서면·현장평가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확정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 (현장평가) (예비)센터장의 의지,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사업 추진 관련자 인터뷰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보충적으로 확인

□ 평가단 구성·운영

- 지역·산업계 인사, 고등교육 전문가 등 관련 분야별로 대표성이 갖춰지도록 평가단 구성
 - ※ 전문가 풀을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며, 신청규모를 고려하여 평가 위원 수 최종 확정
- 단일패널로 운영하며, 평가단 구성 시 소속 기관 소재지 등 상피 조건을 고려하여 평가 공정성 확보

□ 부정·비리대학 수혜 제한

- 대학의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붙임 2]의 '신규선정' 시 수혜 제한 규정 적용
 - '19.1.1일부터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대학의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아 선정평가에 반영
 -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후 최종 선정 이전까지의 기간 중 확인된 부정비리 사안*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및 처분
- * 대학은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 추가 제출

□ 평가항목

영역		항목	배점
1. 사업추진방향 (70)		1-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정성	30
		1-2. 핵심분야 선정의 적정성	40
2. 사업추진체계 (90)		2-1. 조직구성계획의 적정성	40
		2-2. 조직운영계획의 적정성	40
		2-3. 센터장의 역량	10
3. 사업추진내용 (240)	(가) 대학교육혁신 (80)	3-1. 대학교육혁신 지원·관리 계획의 적정성	20
		3-2. 대학교육혁신 추진 계획의 적정성	60
	(나) 핵심분야별 과제 (80)	3-3. 핵심분야별 과제 지원·관리 계획의 적정성	20
		3-4.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계획의 적정성	60
	(다) 연계계획 (80)	3-5. 핵심분야 내 연계 계획의 적정성	20
		3-6. 사업 간 연계 계획의 적정성	60
4. 재정투자계획 (50)		4-1. 재정투자계획의 적정성	30
		4-2.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20
5. 성과관리계획 (50)		5-1.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	20
		5-2.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20
		5-3. 성과확산 및 환류방안의 적정성	10
계			500

< 평가주안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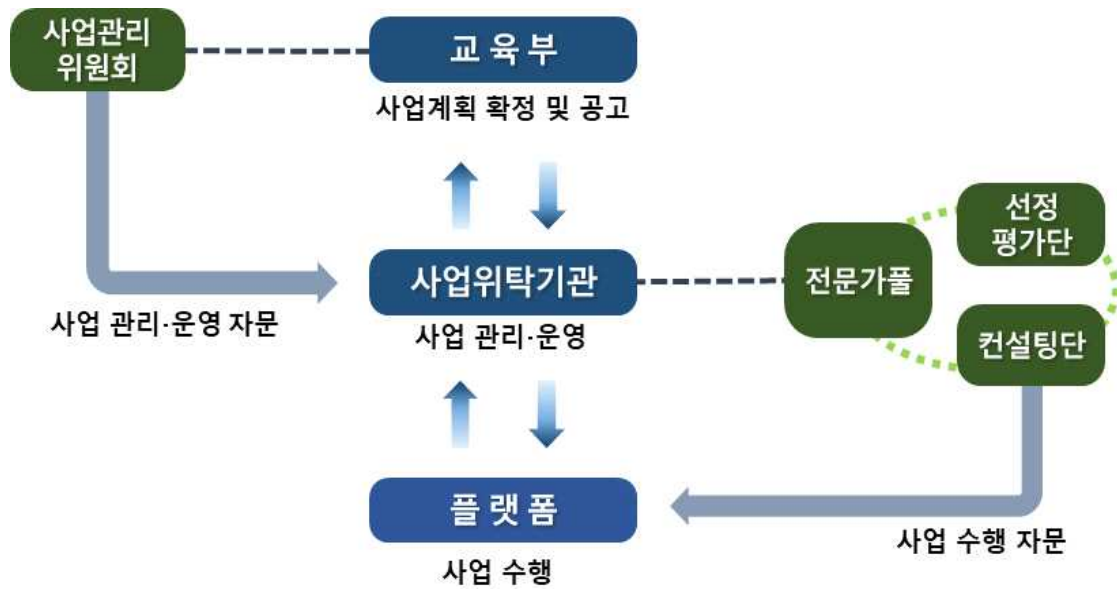
1. 사업추진방향
1-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현황분석(위기현황, 가용자원)의 정밀성 ▶ 대학과 지역 간 연계현황 분석의 정밀성 ▶ 분석 결과와 지역의 목표 간 논리적 정합성
1-2. 핵심분야 선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지역혁신성장계획 등과의 정합성 ▶ 우선순위(필요성·시급성 등), 연계성 등을 고려한 핵심분야 선정의 적정성 ▶ 의견수렴 절차(공청회 등), 데이터 분석 등 지역수요 반영을 위한 과정의 적정성
2. 사업추진체계
2-1. 조직구성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부조직 구성, 조직규모 등 조직체계의 적정성 ▶ 총괄대학, 중심대학, 지자체 부서간 역할 분담의 적정성(역량, 추진의지 등 포함)
2-2. 조직운영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협업위원회 운영계획의 적정성(회의 규칙,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등) ▶ 조직인력 확보(파견인력, 전담인력 채용) 및 운영(업무분장 등)의 적정성 ▶ 사무소 공간 확보의 적정성
2-3. 센터장의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장의 전문성, 리더십, 의지, 소통능력 등
3. 사업추진내용
3-1. 대학교육혁신 지원·관리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의견수렴, 합의과정 등)의 적정성 ▶ 대학별 대학교육혁신방안 추진현황 점검·관리 계획의 적정성
3-2. 대학별 교육혁신 추진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별 교육체계 분석·진단 결과와 대학교육혁신 방향의 정합성 ▶ 대학별 교육혁신 방향에 부합하는 개편방안의 구체성
3-3. 핵심분야별 과제 지원·관리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분야별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기반 조성 계획의 적정성 ▶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현황 점검·관리 계획의 적정성

3-4.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분야 내 대과제(성과목표) 설정의 적정성 ▶ 소과제 구성의 적정성 ▶ 소과제 수행단위 및 협업기관 구성의 적정성(역량, 추진의지 등 포함)
3-5. 핵심분야 내 연계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분야 내 ‘대학교육 혁신’과 ‘분야별 과제 추진’ 연계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3-6. 사업 간 연계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기관 간 정보 공유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 대학 관련 사업 정보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 사업 간 연계 추진 및 관리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4. 재정투자계획
4-1. 재정투자계획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팀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 배분기준 설정 등 분야별 재정투자계획의 적정성
4-2. 예산편성·집행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집행기준 설정 등 사업비관리계획의 적정성 ▶ 세부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집행계획의 구체성
5. 성과관리계획
5-1.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규칙·학칙 등에 참여주체들의 운영규정 반영계획의 적정성
5-2.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의 적정성
5-3. 성과확산 및 환류방안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의 지속성 및 확산·환류방안의 체계성

V. 사업 관리

1 운영 관리

□ 운영체계도



□ 운영주체

- (교육부) 사업기본계획 확정·공고,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등 사업 총괄
-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관리·운영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신규 선정평가 시행, 성과평가 실시·분석
 - 전문가풀·평가단·컨설팅단 구성·운영,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
- (전문가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풀을 구성하되, 균형위 등 다양한 기관의 추천인사 포함
 - 선정평가와 컨설팅 간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풀 내에서 선정평가단과 컨설팅단을 연계하여 구성·운영

□ 운영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

- (협업위원회 협약) 지자체, 총괄대학, 중심대학, 지역혁신기관의 장들은 「협업위원회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협업위원회' 구성
 - 지역협업위원회의 목적, 구성원 간 협력과 역할 등 포함
- (사업협약) 선정된 플랫폼은 사업위탁기관과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협약」 체결
 - 총괄운영센터 장,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하는 지자체 장, 총괄대학의 장, 중심대학의 장, 지역혁신기관의 장, 사업위탁기관의 장이 연명 날인
 -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달성해야 하는 주요성과, 지자체·중심대학·센터의 주요 의무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교부·관리 등 포함
- (참여협약) 대학교육혁신 참여대학은 총괄대학의 장과, 핵심분야별 과제 참여기관은 중심대학의 장과 「참여협약」을 체결하며 주요 의무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등 포함

2 예산 관리

□ 사업비 교부

- 총사업비는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구성
 -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 지자체 장의 추경예산 확보 협약서 첨부
- 국고는 사업위탁기관을 통해 총괄대학(대학회계 또는 교비회계)에 교부하며, 지방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총괄대학(대학회계 또는 교비회계)에 교부

□ 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는 총사업비를 교부받은 ‘총괄대학’이 총괄관리
 - 총괄대학의 대학회계 또는 교비회계에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00지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총괄계정(계좌)”을 설치하여 관리
 -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위해 별도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 지정
- 총사업비 중 ①대학교육혁신본부 예산은 ‘총괄대학’이 총괄 계정과 분리된 대학교육혁신 별도 계정(계좌)*을 설치하여 관리
 - * (예시) “00지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대학교육혁신 계정”,
- 총사업비 중 ②핵심분야별 팀 예산은 각 ‘중심대학’에 재교부하고, 중심대학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대학회계 또는 교비회계에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계좌)*을 설치하여 직접 관리
 - * (예시) “00지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핵심분야 계정”
 - 하나의 대학이 두 개 이상의 핵심분야 중심대학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에는 핵심분야별로 별도 계정(계좌)을 설치하여 관리
 -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위해 별도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 지정

□ 사업비 집행

-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사업비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원인 행위)을 하면, ‘사업비를 관리하는 기관’이 지출행위를 함
 - ※ (예시1) 00대학이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학사구조개편 시, 수행기관인 00대학이 대학교육혁신 예산을 관리하는 ‘총괄대학’에 해당 비용 청구
 - ※ (예시2) △△연구소(주관기관)-00대학(협업기관) 공동과제 추진 시, 수행기관인 △△연구소가 해당 핵심분야 예산을 관리하는 ‘중심대학’에 비용 청구
- 사업비는 ‘사업비 항목별 집행기준’([붙임3])에 따라 집행

- 사업 추진 중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등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부정·비리 제재 결과 등에 따라 발생한 재원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방안 결정
 - 사업기간 중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체 부담
 - 법령 위반*, 입시비리 등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정·비리 사안도 일정 수준 제재
-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사업기간 종료 후 총사업비 관리주체(총괄대학)는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의무를 지님
 - * 별도계정을 관리하는 대학은 총사업비 관리주체에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비 정산) 사업위탁기관에 사업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
 - (결과보고)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한 자체평가 결과를 첨부한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포함) 제출
- 사업비는 1차년도 사업종료일인 '21.5월 말까지 집행 완료
- 회계법인에 의한 사업비 집행 점검 실시

3 성과 관리

1. 컨설팅 지원

□ 컨설팅단 구성

- 지역·산업계 인사, 고등교육 전문가 등 관련 분야별로 대표성이 갖춰지도록 평가단 구성
 - ※ 전문가 풀을 중심으로 컨설팅단을 위촉하며, 선정평가단과 컨설팅단 연계
- 컨설팅 매뉴얼 제작, 컨설팅단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컨설팅단의 전문성과 사업이해도 제고

□ 컨설팅 운영

- 사업계획 단계·사업추진 단계 등 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관리
 - (계획수립 컨설팅) 사업을 준비 중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안 작성 관련 행정컨설팅 및 1:1 사전질의·응답을 실시하며, 공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컨설팅 내용은 공개
 - ※ 교육부와 사업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 (보완 컨설팅) 최종 선정된 플랫폼의 사업계획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성과목표의 적정성 및 재정투자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시행 전 재점검하여 수정·보완사항을 자문·권고
 - (맞춤형 컨설팅)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정기적 및 플랫폼별 수요가 있을 시 진행
-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컨설팅 결과 및 반영여부를 성과평가에 포함

2. 성과 평가

- (평가지기)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협약사항 이행여부, 사업 추진 상황 및 성과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실적 등 점검
 - 평가 결과 사업 추진이 미흡한 경우 경고, 개선권고 등을 실시
 - ※ 시범→계속사업으로 전환 시 성과평가 결과를 2년차에 반영
- (성과지표)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 (핵심지표) 사업의 핵심가치(개방과 참여, 공유와 연계, 성과와 지속가능성)를 고려한 공통 성과지표
 - ※ 지표산식은 추후 안내 예정
 - (자율지표) 플랫폼별 사업계획에 따라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중점 관리(5개 내외)
 - ※ 현재값을 기준으로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목표수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 등 확인

< 성과지표(안) >

구 분	지 표
핵심지표	▶ 지역 내 대학 관련 사업 정보 공유·관리체계 구축 실적 ▶ 기관 간 인력 교류 실적 ▶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 지원을 위한 제도화 실적 ▶ 사업 간 연계 추진 실적 ▶ 대학교육혁신본부의 제안에 따른 대학의 교육혁신 추진 실적* *개편유형(대학 간 역할분담, 학사구조 개편, 교육과정 개편)별 가중치 부여
자율지표	▶ 사업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3. 성과 공유 및 홍보

- (성과공유) 사업계획서, 성과평가 결과 및 우수사례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
 - 주요 성과의 타 지자체·대학 확산을 위한 워크숍·포럼 등 추진
- (홍보방안) 대학-지역 간 협업체계 구축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수상함으로써 사업의 성과 확산

VI. 향후 추진 일정

- ☐ 사업 기본계획 확정·공고 : '20. 3. 27.
- ☐ 사업 신청 예비 접수 : '20. 4. 27.
- ☐ 플랫폼별 사업계획서 제출 : '20. 6. 5.
- ☐ 선정평가 실시 및 선정결과 확정 : '20. 7월
- ☐ 사업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 8월
- ☐ 플랫폼별 성과평가 실시 및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21. 6월

근거 법령			학교 종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일반대학
		제2호	산업대학
		제3호	교육대학
		제4호	전문대학
		제5호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제6호	기술대학
		제7호	각종학교
	제30조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		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제1조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조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조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제1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제6조 (대학원대학)		한국학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대학원대학)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암관리법	제29조 (대학원대학)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전공대학)		국제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제32조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삼성전자공과대학교 KDB금융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중공업공과대학 포스코기술대학
	제3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영남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교
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3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육군 제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조		국방대학교
(구)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제2조		국방정보 대학원

□ **기준 적용**

- 우리 사업은 부정·비리(감사처분 및 행정처분, 형사판결) 대학의 수혜제한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의 기준을 따르며,
- 부정·비리 정도 판단기준 등 동 기준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 매뉴얼(‘20.3월 개정)’에 따름

□ **제한 방법**

- ‘플랫폼의 최종 제한수준’은 각 중심대학(총괄대학 포함)의 제한수준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 각 중심대학의 제한 수준은 아래의 [표]에 제시된 수치를 중심대학의 수(N)만큼 나눈 값으로 함

부정·비리 정도	신규선정	계속지원
중대	총점 10%	총 사업비 40%
상	총점 8%	총 사업비 30%
중	총점 4%	총 사업비 10%
하	총점 1%	총 사업비 5%

※ (예) 4개의 중심대학 중 부정비리 ‘상’ 대학 1개교, ‘중’ 대학 1개교인 경우 총점의 8%의 1/4인 2%, 4%의 1/4인 1%를 적용하여 총 3% 제한

- 합산한 제한수준의 상한을 신규선정 10%, 계속지원 40%로 하되,
 - 사회적 파장이 큰 부정·비리인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중 가능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로 부정·비리의 정도에 따른 수혜제한 수준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중감경 가능

※ 고려사항: 대학 자체감사를 통한 부정·비리 제한 여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등

항 목	집행기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대학원생 조교 포함)에 대한 보수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성과급 <p>(집행 제한)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등, 교원 개인 연구활동비</p>
교육체계 개편비 / 소과제 구성·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제반 비용(대학 간 역할 분담, 학사구조 개편을 위한 개발·운영비 등) • 소과제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연구활동비, 산학협력지원비, 기술개발지원비, 실험실습비 등) <p>(집행 제한)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 기 개발된 교재에 대한 원고료, 외유성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연수비 등</p>
기자재 구입·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개편 및 소과제 추진을 위한 장비(H/W, S/W) 구축경비 • 정보 공유·관리시스템 등 플랫폼 운영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설치·구입·임차·사용 경비 • 기자재 운영 관리를 위한 PC, S/W, 부품, 소모품 등 <p>(집행 제한) 교원 개인연구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p>
환경 구축 및 개선비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운영 및 교육(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등에 필요한 환경(내부 설비, 정보화, 냉난방 등) 및 시설 구축·개선 비용(리모델링 포함) • 사업에 사용되는 기존 건물과 설비의 유지보수 경비 •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 ▶ 전체 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집행 <p>(집행 제한)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및 토지매입 경비</p>
기타 사업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총괄관리 및 지원 경비 •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 ▶ 전체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집행 <p>(집행 제한) 통상업무 경비(직원 워크숍 경비 등),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 지원비, 사업과 무관한 홍보비·행사비·기념품비 등 경비</p>

※ 구체적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은 추후 사업위탁기관에서 안내

□ 추진배경

- (지역혁신체계의 중요성)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육성과 혁신성장의 토대로서 지역혁신체계 정비가 시급히 요구
- (국정기조 및 정책방향) 지방분권·균형발전의 국정기조를 반영한 지자체 주도의 산업육성·혁신 생태계 구축 필요
- (대내외 인식) 지역 주도 혁신성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VIP 계서도 지역대상 사업과정에서 정부 주도 방식의 한계 강조(18.8)

□ 지역혁신체계 문제점

- (칸막이식 운용) 각 부처 간 분절적 사업추진으로 사업간 연계성이 낮고 지역내 통합적 성과창출 한계 → 예산투입대비 낮은 성과 반복
- (중앙중심) 지자체는 사업의 공식적 전달체계에서 사실상 배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도적 사업 추진이 구조적으로 곤란
- * 부처는 전담기관을 통해 출연금 예산을 집행하고 지역혁신기관을 통해 사업 운영·관리
- (관리체계 부재) 혁신기관 간 협의체는 형식적 네트워크 수준, 지자체가 기관 간 사업을 연계·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 미흡

□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 지역단위에서의 혁신성장전략 기획 및 실행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고 중앙부처는 지원·협력하는 종합적 체계 마련
- ① 체계개편의 대상이 되는 지역혁신기관·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 해당기관·사업을 지정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 확보
- ② 지자체가 수립한 「지역혁신성장계획」에 기반한 「투자협약」 형태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도의 사업 기획·관리 및 성과창출 강화
- ③ 지자체 중심의 혁신 거버넌스 강화로 사업 기획·실행을 실질적으로 관리
- ④ 현장 수요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시행체계 개선

□ 개편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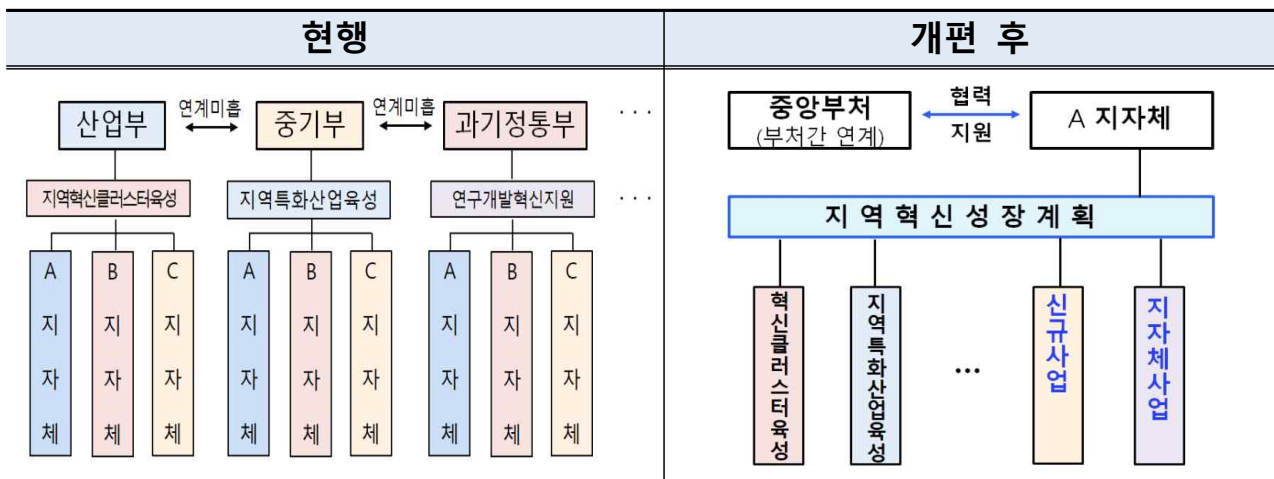
① 지역혁신기관 지정 및 사업 관리체계 마련

- (기준 마련) 지역혁신기관은 지역밀착 혁신자원을 연계·활용하는 기관·조직, 지역혁신사업은 혁신기관 등을 통해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관리)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지역혁신기관 및 사업 중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후, 균형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

② 지역 혁신사업 추진방식 개편

- ◇ 시도는 多 부처의 지역혁신사업 등을 연계·활용, 지역 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
- ◇ '지역혁신성장계획'을 토대로 多부처 사업을 연계·효율화하여, 지역자율로 추진하는 '투자협약' 방식으로 사업 시행

< 사업추진 방식 개편 개념 >



- (계획 수립) 지역 산업생태계 육성 및 혁신성장 방향에 맞추어, 시도 자율로 계획을 수립하되, 수립과정에서 균형위 및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
 - (가이드라인 제공) 균형위가 계획수립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시도에 제공
 - (컨설팅 등 지원) 시도의 계획 수립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컨설팅단' 운영

- (주관기관 지정) 시도는 계획수립 및 성과분석 등을 책임 있게 실행할 주관기관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정
- (사업신설) 기존 사업 외 신규사업 필요시, 시도가 균형위를 거쳐 부처에 제안, 부처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에 반영
- (계획 확정) 부처별 검토·협의 후, 균형위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확정
- (사업추진) 균형위에서 확정된 시도별 계획에 따라 부처-시도 간 ‘지역발전투자협약’ 후 시도 자율적 추진, 부처 협력·지원
- 시도는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균형위·부처·시도·혁신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추진상황 공유 및 문제점 보완
- (사후관리) 시도 자체평가 및 부처·균형위 평가 시행, 차기 지역 혁신성장계획 수립 및 지역혁신기관 역할 조정 등에 반영

③ 지역혁신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

- (지역) 지역혁신협의회가 실질적인 사업연계·조정·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과협의회의 기능을 강화
- 분과협의회*에는 산업 및 R&D, 기업육성분야 기관들이 참여, 「혁신 계획」 관련, 사업 조정·평가·공백사업 발굴 등 전문적 지원역할
- *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대학, 특별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참여
- ※ 지역사회 인적·물적·지적 자원의 거점인 대학을 혁신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대학 간 혁신모델 개발 추진
- (중앙) 균형위 중심 중앙부처간 지역혁신 조정체계를 활성화하고 중앙·지방간 공무원의 전략적 인사교류 확대 추진

④ 지역혁신활동 지원서비스 체계 개편

- (장비·서비스 공동활용) 부처가 지역단위에 운영 중인 연구 장비·시설정보 등을 시도를 중심으로 연계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 (혁신성장 바우처 운영) 부처별 혁신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 지원, 마케팅, 사업화 등의 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칸막이 없이 제공

붙임 5

연계 가능 사업 예시

(백만원)		
부처	사업명	'20 예산
산업부	1) 지역 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2,900
	2)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1,088
	3) 지역혁신 특성화기반구축	56,700
	4) 광역협력권산업육성(R&D)	59,816
	5) 광역협력권산업육성	25,200
	6)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77,501
	7)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9,600
	8)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17,025
	9)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12,920
	10)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119,928
중기부	1)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사업	6,230
	2)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	5,000
	3) 지역특화산업육성(시도기업지원)	73,838
	4) 지역특화산업육성+(R&D)	97,406
과기부	1)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사업	10,500
	2)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13,221
	3) 지역균형발전 SW·ICT 융합기술개발	9,125
	4) 연구개발특구육성(R&D)	115,427
	5) 연구개발특구육성 및 인프라지원	30,167
행안부	1) 지역혁신포럼	3,700
국토부	1)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2,220
교육부	1)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10,000
	2) 산학협력 고도화형 LINC+	312,551
	3) 국립대학 육성사업	150,000
	4) BK21+	383,983
	5)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특별교부금)12,000

핵심분야	스마트 선박 건조 산업	
	지자체	산업정책국 해양산업과
	대학	중심대학 A
대과제	조선부품 분야 핵심인재 양성 및 기술개발	
소과제 1	▶ (조선부품 계약학과 운영) 공업 고등학교 기계과-전문대학 기계 공학과-부품소재기업 연계교육 과정 마련 및 계약학과 운영	참여대학 E(기계공학과) + 특성화고 H + 기업 I
소과제 2	▶ (고교학점제 연계 추진) 특성화고 기계·부품 관련 전공 학생들이 대학 내 기계공정 과목을 수강 하면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고교 학점제 연계 추진	중심대학 A(기계공학과) + 특성화고 F + 교육청 G
소과제 3	▶ (제조공정 효율화 방안 연구) 부품 기업들의 제조공정 효율성 진단 및 효율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	중심대학 A(경영학과, 기계공학과) + 지역기업 D
소과제 4	▶ (지역 부품사업체 연구개발 지원) 자체 연구개발 부서가 없는 소규모 부품업체의 부품공정효율화 개발지원	참여대학 K(시스템공학과) + 지역기업 J

붙임 7

지자체 출연법인 설립절차

단 계	내 용
설립방침 결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설립 검토안 마련 ○설립 추진 기본방침 결정 ○타당성 검토 전 1차 협의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심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타당성 검토계획 작성 - 설립타당성 검토 (설립타당성 검토용역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주민의견 수렴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조례 제정(안) 마련
설립협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또는 시도와 협의 (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생략
조례·정관 제정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결과 공개 (주민의견 반영 여부, 운영심의위 심의 결과, 협의 결과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의회심의 등 조례제정·공포
설립단계 [붙임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공모 및 임명 ○정관 및 제규정 제정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출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등기 ○지정·고시 신청

붙임 8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요건 및 절차

구 분	비 고
단체의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의 작성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포함) • 재산의 출연행위
기관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기관 (이사, 이사회 등) • 의사집행기관
설립 허가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설립 발기인의 인적사항,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등, 임원 취임승낙서, 정관,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재산목록, 재산출연증서, 재산증명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사무실 확보증명서 등)
주무관청의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관청이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재량 판단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교육부 직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준('11.12.12., 장관결재)</p> <p>가. 전국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기본재산 500억원 이상이거나 1년 사업비 30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 중 희망하는 법인</p> <p>나. 정부에서 출연한 비영리법인</p> <p>다. <u>정부정책 추진상 필요한 비영리법인</u></p> </div>
법인설립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설립 등기

□ **도르트문트 시 (독일)**

- (지역여건) 1950년대부터 석탄·제철 산업 쇠퇴 및 토양·수질오염으로 인한 지역 환경문제 심화
- (협업체계) 도르트문트 대학을 중심으로 도르트문트 시, 테크노파크(tZD), 기업, 연구소 간 협업체계 구축
- (추진내용) 신산업(ICT·미세전자기계공학·물류) 육성 및 도시경관 개선, 수질정화 등 지역재생 촉진
 - ※ (도르트문트 대학) 16개 학과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80여개 융합교육과정 운영, 대학 내 기술 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성과) 일자리 10,160개 창출('15), 인구 16,000명 증가('11→'18)

□ **필라델피아 시 (미국)**

- (지역여건) 1990년대 중반 제조업 쇠퇴와 급속한 교외화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경제 붕괴, 범죄율 증가, 교육수준 하락 등
- (협업체계)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중심으로 필라델피아 시, 연방정부, 지역기업, 지역사회 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 (추진내용) 웨스트 필라델피아 계획(WPI: West Philadelphia Initiative)을 수립하고, 지역재생을 위한 5대 목표(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다양한 주택 선택권 제공, 상가 활성화, 경제개발 지원, 지역 교육여건 개선) 추진
 - ※ (펜실베이니아 대학) 지역사회 전담 센터(Netter Center for Community Partnership)를 부총장 직속기관으로 개편하여 지역협력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수행
- (성과) 범죄 건수 40% 감소('96→'02), 대학이 운영하는 유치원·초등학교 개교('01), 지역 상가보행자 수 86% 증가('95→'02)

□ 에스포 시 (핀란드)

- (지역여건) 2008년 노키아 사태 이후 제조업 산업쇠퇴, 경제상황 악화
- (협업체계) 알토대학을 중심으로 에스포 시, 기술연구센터(VTT), 오타니에미 혁신단지 간 협업체계 구축
- (추진내용) 알토 벤처 프로그램, SLUSH, Start-up SAUNA 등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 (알토대학) 학과 간 유기적 협력구조를 구축, 전공구분 없이 수강 가능한 선택과목 확대 지원, 연구소 유치 (지자체) 혁신부서가 대학 내로 이전
- (성과) 핀란드 벤처-스타트업 전체의 50% 배출

□ 기타큐슈 시 (일본)

- (지역여건) 공업지역으로서 제조도시로 발전하였으나 1960년대 심각한 공해문제 직면 및 인구 감소
- (협업체계) 기타큐슈시립대학 등 4개 대학,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 (추진내용) 지역의 공업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구비 및 공동연구 수행
- (성과) LSI 기술, 마이크로·나노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 창출, 젊은층 인구 유출 감소, 그린성장모델 도시로 선정('11, OECD)